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6.12.(수)
책 임 자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박 주 영(02-2100-2510)	담 당 자	김 세 화 사무관 (02-2100-2511)	

제 목 : 「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◆ **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+ 3% 이내로 제한**

□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,

-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%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*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

*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(%): ('17.6말) 19.7 → ('17.12말) 23.6 → ('18.6말) 27.0

□ 대부업법 개정 ('18.12.24. 공포, '19.6.25. 시행)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 (§8③)

*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·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(대부업법 §15③)

-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(§5⑤) 개정 ('19.5.21. 공포, '19.6.25. 시행)

□ 이에 따라, 금융위원회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의결하여,

-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+ 3%p 이내로 제한

※ 개정규정은 '19.6.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